

이슈_토론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제언

원 성현 | 부산가톨릭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대학입시제도가 자주 바뀐 나라도 드물 것이다. 수시모집이라는 제도가 등장한 것은 1999학년도 입시부터이다. 대학 입시에서의 연도는 수험생들이 실제로 입학하는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기상으로는 1998년부터가 되겠다. 수시모집이 처음 시작된 이유는 사교육을 지양하고 공교육 중심의 대학입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이었다. 국가가 주관하는 수학능력시험은 제법 난이도 높은 시험이다 보니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교육 없이도 고등학교 생활을 잘하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도 대학 입학의 기

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수시모집 탄생의 배경이다. 수시모집은 그 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약 15년간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수시모집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으나 2013학년도 수시모집의 선발비율은 63%에 근접할 정도로 늘어났고, 올해 고 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 입시에서의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66.25%다. 해마다 1~2%씩 늘어난 결과이다. 어느덧 대학 입학의 중심이 정시모집에서 수시모집으로 옮겨진 꼴이 되었다.

변화무쌍한 입시제도의 변천사 중 최근 수년 동안의 키워드는 단연 입학사정관제이다. 2009학년도 입시에서 4,476명을 선

발하려 했던 것에 비해 2014학년도 입시에서 4만 9,188명을 선발한다고 하니 계획과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 사이에 10배가 넘는 성장을 가져왔다. 입학사정관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모두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실시하고, 정시모집에서 실시하는 대학도 일단 수시모집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정시모집에서도 다시 실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모집에서의 입학사정관제가 가히 대학 입시제도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제란 무엇일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 약칭)의 정의에 의하면 입학사정관제란 ‘대입 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즉, 성적의 높고 낮음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던 기준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자에 대한 정성평가를 가미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평가의 기초자료는 출신학교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지원자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다. 그런데 정성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조작되었다고 한다. 올해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가 217건 정도 조작되었음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는데 대전·대

구·울산 지역 학교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라고 하니 전국으로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틀림없다. 유난히 입시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이다 보니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다.

올해 초, 근원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된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교육부와 대교협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뺏던 기억이 있다. 사실 대학 입시 기본계획은 해당 학년의 대학 입학 시점 15개월 전에 이미 수립되어 공표된다는 것만 알았어도 그런 소문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자녀들의 대학 입시라면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극성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은 한동안 제법 위력을 발휘하고서야 비로소 사라졌다.

2. 정부 주도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앞에서 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학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주입식 교육에 한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다소 실험적인 대입 제도였다. 실험적이 보니 시작을 대학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였다. 즉,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 것인데 그 금액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했

다. 늘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이런 달콤한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 어차피 입시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했고, 그걸 정부가 준다고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지원 사업에 응하여 그 중 상당수의 대학(2012년의 경우 66개 대학)이 예산을 받아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양적 기준을 중요하게 요구한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가?’, ‘전임입학사정관을 얼마나 많이 채용했는가?’, ‘입학사정관제를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가?’와 같은 이상한 기준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한 것이다.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해야하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하는 웃지 못 할 약속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과 기준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양적 평가가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대학에서 8년째 입학홍보처장으로 입학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양심적으로 말하건데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입학정원의 20% 넘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장 바람직한 비율은 10% 내외라고 본다. 과도하게 선발하려고 하다 보니 지원자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다 주지 못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과 서류 중심으로 3~5배수에게만 면접의 기회를 준다. 그렇다면 면접대상자 안에 들어가지 못

한 학생은 자신의 잠재력을 도저히 보여 줄 방법이 없다. 대학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잠재력을 보여 줄 기회조차 수험생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류가 부각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이라는 부작용이 수반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면접을 하다보면 서류의 진위 여부가 상당히 가려지기 때문에 면접은 필수적인데 대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맹목으로 애써 이를 외면한다.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도록 유인한 공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양적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입학사정관제의 본질을 망각하게 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3. 입학사정관제의 기여

각 대학마다 입장이 다소 상이하겠지만, 필자가 속한 대학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입학사정관제는 긍정적 측면이 강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치고 2018학년도에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월한다는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18학년도부터는 재학생 충원률이 50% 밑도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 틀림없다. 즉,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학한 학생들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한 대학에 입학했다고 4년 후에 그 대학을 반드시 졸업하는 것은 아

니다.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대학에서나 발생하는 일이고,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쓸림 현상 때문에 더 빈번히 발생한다. 유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입학 후 한 학기만 마치고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부터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정든 캠퍼스와 이별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 입시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재학생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특단의 제도 및 조치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할 당시부터 단지 점수만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 대한 충성심도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는 수험생의 충성심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에서만은 가능하다. 한 해 입학 정원이 965명인 필자가 속한 대학에서는 지난 4년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모두 174명을 선발했다. 그 학생들 중 2013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은 단지 1명 뿐이다. 이탈율이 1%도 채 안된다.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탈율이 낮다. 즉 충성심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은 이 대학에서 학업을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학은 그 학생들을 위해 연속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쉬워지고 학생지도가 용이해져서 졸업 후 사회로 배출될 때 그들에게 적합한 직장 및 직업을 선택하는데 학교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진다. 즉, 충성도 높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프

로그램의 성패에 결정적인 키를 줘고 있는 셈이다. 키를 줘고 있는 이들을 대학으로서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입학 후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도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다른 학생을 비교하고 싶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띠는 특징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이 전체적으로 상위권도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하위권도 아니었다.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만 발견했다. 한편,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 중 최고 학년이 현재 4학년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로 배출되어 어떻게 직무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둬야 할 것이다.

4.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제언

이제 필자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손을 떼고 예산부터 운영까지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만일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동참하기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면 지금까지 지원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이미 과하다(사실 처음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각기 처한 현실이 다르다. 같은 국립대라고 해도 대학별로 추구하는 바가 다

르고 특성화 전략이 다르다. 대학 소재지와 그 인근의 수험생 지원의 규모와 특성도 다르다.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대학 수도 많고 더 다양하다. 그런데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흠 잡하지 않기 위해 어느 대학이 더 나은 실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대학의 특성화는 물 건너가게 된다. 결국 대학은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부분만을 강조 할 수밖에 없고 특성화를 살린 학생 선발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건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은가? 학교 다닐 때 자기 소신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 가능성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공부했던 그런 경험 말이다.

둘째, 대학도 부실한 학생 선발이 되지 않도록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비율을 10% 내외로 묶어야 한다. 입학정원이 3,000명인 대학의 10%라면 300명이고, 지원율이 10 대 1 이라면 평가해야 할 학생이 다시 3,000명이 된다. 만일 선발 비율이 20%면 평가 대상자는 그 배인 6,000명이 된다. 그런데 주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은 거의 20%를 상회한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원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 또는 성적 안에 드는 학생들만 선별해서 본선에 올려야 한다. 본선이라고 함은 당연히 면접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다. 면접 대상자를 3배수 선발한다면 4배수 안에는 들

지만 3배수 안에는 못 들어서 면접을 볼 수 없는 학생은 진정 잠재력을 평가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학생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3배수나 4배수 모두 사실 간발의 차이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누구는 면접대상자 안에 들어서 최종 면접 평가까지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아예 원천적으로 면접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이건 입학사정관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냥 내신성적우수자전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로 지원한 수험생 전원을 면접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드시 만나야 한다. 비율을 10% 내외로 묶으면 지원자 전원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가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불법 수정 또는 조작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물며 자기 소개서는 어떠할까? 과연 지원자 본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는 있을까? 지원자와 만나서 진솔하게 묻고 답하다 보면 서류의 진위 여부를 상당히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따라서, 대학은 다소 힘들더라도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도 면접을 통해 직접 가려야 한다. 서류는 훌륭하나 실제로는 아닌 학생도 있고, 서류는 다소 부족하나 실제로는 훌륭한 학생도 있음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면접이 그나마 최선인 까닭이다.

넷째, 교육부나 대교협은 각 대학별로 개발한 입학사정관제를 몇 가지의 모형으로 통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입학사정관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 전형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 전문가 조차도 구분하기 힘든 전형 방법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고 적용시키는 데 편리함을 줘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는 이미 수년 동안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만 보완해도 빠르게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 단, 입학사정관제만이 학생을 선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모두가 인식하면 된다.

사례를 보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국의 사례는 정말 외국의 사례일 뿐이다. 처음 몇 번 봤으면 그 다음에는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아니, 처음부터 외국의 사례를 안 봤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남의 사례를 보면 첫 갈피를 잡는 데 유리할지는 모르나 그 순간 이미 창의성은 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집합장이어야 한다. 고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당장은 부각되지 않지만 내공을 다진 학생도 필요하다. 시험만 봤다 하면 높은 점수를 얻어내는 학생도 필요하다. 말 잘하는 학생도 필요하다. 창의적인 학생도 필요하다. 조직에 충성심이 높은 학생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이와 같은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분명 한몫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제가 필요하니 안하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이미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우리 현실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5. 맺는 말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고, 암기식 교육을 통한 시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익숙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긍정적으로 본다. 못할게 뭐가 있나 싶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다보면 자꾸 외국의

필자소개

원성현 | 부산가톨릭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에서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에서 석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전산통계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였다. 1992년 3월부터 2001년 2월 까지 지산대학 교수,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전자계산소장, 미국 버지니아공대 방문교수를 역임했고,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을 맡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종신회원, 한국전자거래학회 종신회원,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종신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Fuzzy Approach of Learning Evaluation Model in Intelligent E-Learning Systems』(단독), 『웹 기반 개인화 보조시스템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공동)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능형시스템(교육시스템, 학습시스템, 검색시스템 등)이다.